

특별기고

농업 안전 패러다임 전환, 이제는 필수다

박용철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업 현장의 분주함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 들녘에는 활기가 돌고, 농업인들의 손길은 분주해지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고령화된 농업 인력 구조, 농기계 사용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재해 등은 농업을 더 이상 '안전한 생업'으로만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농업 안전 3중 안전망' 구축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농업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전문성 기반의 예방 중심 체계 구축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방식은 기존의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시도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라는 제도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고령 농업인의 신체적 특성과 작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사고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적 인식에서 벗어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안전문화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농업인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로 나서서 자율성 확보이다. '농업인 안전리더' 양성은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다. 농기계 사전 점검, 보호구 착용 생활화, 작업 전 자율 안전점검 등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특히 지역 공동체 내에서 안전을 서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정책의 지속성과 확산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참여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역시 중요한 축이다. 최근 폭염, 한파, 감염병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 질향 예방요원의 조기 투입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단순한 안내나 계도 수준을 넘어 고령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접근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물 섭취, 충분한 휴식, 적절한 작업 시간 조절, 보호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하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3중 안전망'은 각각 개별적인 정책이 그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이 안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공동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확산시키며, 기후 대응 체계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한 농촌 안전관리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편적인 사업이 아닌 통합적 시스템으로 작동할 때 정책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정책의 확산과 현장 정착이다. 농업·농촌 현장으로의 확대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농업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보완점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다. 그 현장에서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라남도의 '농업 안전 3중 안전망' 구축은 '안전한 농촌'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제 농업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며,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현재를 넘어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고

투표지분류기 해킹? 부정선거 의혹 뜯어보니

김지영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대중은 왜 정보를 왜곡하거나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려 할까." 확증편향은 기준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강화하려는 인간의 인지적 경향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 반대되는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는 의심하거나 배척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확증편향은 선거 과정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는 부정하거나 양비론으로 흐르며, 심지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를 주제로 장시간 유튜브 생중계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약 7시간 동안 이어진 이 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며 외부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선거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기술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이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음모론에 가깝다.

해킹은 기본적으로 외부와의 통신 연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지분류기는 무선 인터넷 접속 기능을

갖춘 장치라 아니며,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장비를 구동하는 운영 프로그램은 인가된 보안 USB를 통해서만 설치되며, 설치 이전에 정당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다.

개표 과정 역시 다중 검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전량 수작업과 육안으로 다시 확인되며, 개표 현장에는 공무원, 개표사무원,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등 약 10만 명이 참여한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장비의 조작만으로 개표 결과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에서는 특정 선거에서 한 후보자의 표가 연속적으로 분류되는 장면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개표 과정 중 재확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미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을 다시 분류기에 넣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 표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영상은 이러한 맥락을 제거하고 특정 장면만을 편집해 오해를 유도한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결과가 실물 투표지에 근거하며, 투표지 이미지는 개표 종료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 필요 시 언제든지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된 이후 전국에서 수십 차례 재검표가 실시됐지만, 선거 결과가 바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오히려 분류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어디까지나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는 장치일 뿐,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유권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표지분류기의 역할은 단순히 수작업 개표를 보조해주는 장치에 불과할 뿐,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유권자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선거 관리 절차의 하자나 의혹을 짚어내고 바로잡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불분명하거나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는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절차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는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선거장비·시스템의 신뢰성과 그 운영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며, 투·개표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더 나은 제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편견을 거두고,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명함과 혜안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선거 의혹·주장에 대한 정확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재수첩

'고유가 지원금' 단기 처방 넘을까

이승홍

경제부 부장



중동발 불안이 다시 서민의 삶을 흔들고 있다. 유가와 물가가 동시에 들쭉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히 꺼내 든 처방은 '현금성 지원'이다.

광주시 역시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전체 시민의 약 70%에 해당하는 97만명에게 1인당 15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지역경제 방어선 구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지원책의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다. 취약계층을 우선 순위로 지원하는 '선별적 보편성' 모델이다. 기

문제는 '일회성 지원'의 한계다. 고유가와 고물가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금이 근근이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

소비 진작이라는 단기 처방과 함께 구조적인 물가 대응 전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는 빠르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원금 사용 기한이 8월 말로 제한된 점도 '속도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임을 보여준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논의와 맞물린 변수도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지원금 사용이 광주지역으로 한정되지만, 향후 통합 이후 사용 범위 확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생활권은 이미 광역화됐는데, 소비권은 행정 경계에 묶여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책 효율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시간을 버는 정책'이다. 급격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일단 지켜내기 위한 버팀목이다.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에너지 비용 절감, 지역업 생태계 복원,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지원금은 또 하나의 '소비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사설

'통합특별시 준비예산' 정부 책임져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가 출범도 하기 전에 큰 빛을 띠어갈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앞서 선행돼야 할 준비 작업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국회는 지난 10일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6조 2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예산, 농어업 유가 지원예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통합정보시스템 가동, 청사 제재치, 통합시의회 구축 등 통합비용 576억원 교육행정통합비용 920억원 등 통합특별시 행정통합 지원예산 1496억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당장 정부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을 보증한 뒤, 나중에 인수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곤 했다. 문제는 이 빛을 국가 예산으로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탕감비용을 빌려주겠다고 자치단체에 전달한 데 있다. 이는 통합준비를 위해 낸 빛을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부채로 전가하겠다는 의도다.

그렇다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보시스템 통합'의 경우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통합시 출범하자마자 행정 시스템 마비 등이 우려되는데, 특히 40년 만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재결합하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첫 사례로 기록이나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데 자칫 준비까지 소홀할 경우 큰 혼란과 피해는 자명하다.

이 문제를 어릴찍 남기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때마다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원의 예산 지원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특별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도 성공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기초 인프라를 세우는 예산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한테 부담을 안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광산 '골목형상점가' 변화 기대되는 이유

광주 광산구 골목형 상점가의 이유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광산구가 그동안 지정하던 이들 상점가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지정 확대 등 양적 팽창에 중점을 뒀던 정책의 중심축을 특성화·차별화 등 질적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옮겨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의 업그레이드에 나선 것이다.

사실 광산구는 민선 8기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와 운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광산구 관내에는 골목형 상점가 139개, 등록된 운누리 가맹점 7445개소가 있다고 한다. 지역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올해부터는 기존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국가 지원과 연계해 대표 거점 상권으로 키우는 특화 상점가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우선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산정산인회 골목형 상점가, 수완나들목 골목형 상점가 2곳에 대해 시장매너지 채용 및 상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광산구는 이들 상점가의 효과성인 특성화 전략 수립과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주변 상권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다른 골목형 상점가도 정부 공모사업 응모 등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업무 등을 돕는 '골목상권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늘어난 이들 상점가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인들 스스로 상권의 특성, 강점을 토대로 한 활성화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머물고 싶은 골목길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둔 20여 개 상인단체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상인단체들이 실시간 소통 판매, 광산구 '천원 더(The) 가치 프로젝트'와 연계한 '천원야장', 소통 만남 골목문화 공간 조성 등 개발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광산구 골목형 상점가의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결과가 기대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